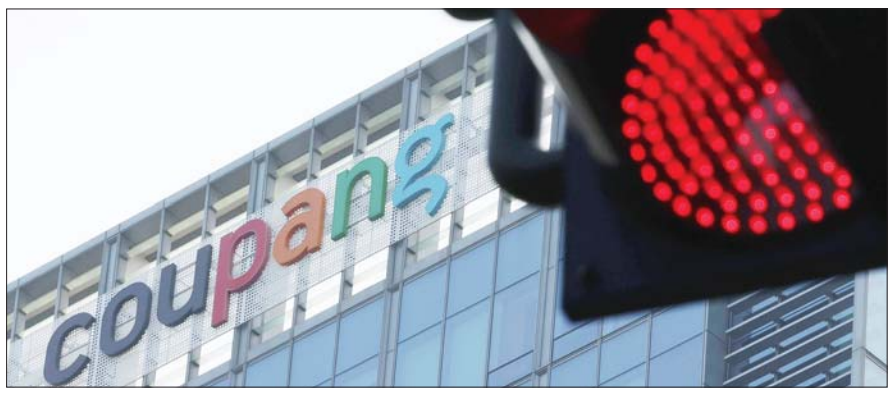
국내최고 인증 받고도 개인정보 털려… ISMS-P '보안 허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현행 인증제도 '실효성'

쿠팡, 2021년부터 4차례 유출 사고
SKT·KT·롯데카드 등 해킹사태
ISMS-P 제도 구조적 한계 드러나

"100% 해킹 막는것 불가능 전제
빠른 탐지·복구, 평가에 포함해야"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국가 최고 보안 인증을 들고도 개인정보가 줄줄 새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제 역할을 못한 '보안 허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통합 인증제도에도 불구하고 내부자 유출은 물론 외부 해킹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인증이 '보안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행 인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IT업계 안팎으로 ISMS-P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ISMS-P 인증을 보유한 기업인 쿠팡은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어 3370만 명이 넘는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의원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ISMS-P 최초 인증을 획득하고 올해 갱신 심사까지 통과했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 체계 인증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 원 이상인 쿠팡은 의무 대상자다.

문제는 '인증'과 '실제 보안'의 괴리다. 쿠팡은 인증을 획득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의 굵직한 유출 사고를 냈다. 2021년에는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 테스트 소홀로 14건의 정보가 유출됐고,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에서는 배달원 13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당시 쿠팡은 "안심번호를 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음식점에 그대로 넘어갔다. 지난해 12월에는 판매자 시스템 '윙(Wing)'의 로직 오류로 2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됐다. 급기야 이번 달에는 내부자에 의해 무려 3370만 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증 마크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이번 쿠팡의 내부자 유출 사태에 앞서서는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등이 ISMS-P 인증을 획득하고도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연이어 일어난 ISMS-P 인증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기업의 실수를 넘어 ISMS-P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 인증이 '스냅샷'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ISMS-P는 심사받는 그 시점의 보안 상태를 점검한다. 하지만 IT 환경은 매일 변하고 해킹 기법은 진화한다. 롯데카드가 ISMS-P 인증을 받은 바로 다음 날 해킹을 당한 사례나, 통신 3사가 모두 인증을 보유하고도 털린 사례는 인증이 '지속적인 보안'을 담보하지 못함을 방증한다.

둘째, '형식적 체크리스트' 심사의 한계다. 현재 심사는 101개의 항목을 서류와 인터뷰 위주로 점검하는 방식에 치우쳐 있다.

김용대 카이스트 교수는 "심사원들이 보안 전문성은 있지만, 각 기업의 특수한 비즈니스 로직이나 인프라 깊숙한 곳의 허점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 사례처럼 정책상으로는 '보호'한다고 되어 있어도, 실제 시스템 운영단에서 구멍이 나면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기 힘들다.

셋째, 기업들의 '면피용' 인식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ISMS-P 인증을 받고도 유출 사고로 징계받은 기업은 27곳에 달한다. 많은 기업이 인증 획득을 '보안 투자의 끝'으로 인식하거나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한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실제로 쿠팡을 비롯한 13개 기업은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적 의무인 '72시간 내 신고'조차 지키지 않았다.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업계에서는 ISMS-P가 무용지물인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기업 보안의 '최소한의 기준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박대준 쿠팡 대표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신 쿠팡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통신사 금융사에 이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사까지 이어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안정적 성장' BNK금융, 빈대인 연임 유력

임추위, 차기 CEO후보군 4명 압축
심층면접 거쳐 8일 최종후보자 추천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이사


안감찬 전 BNK부산은행장

BNK금융 임추위가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4명까지 압축한 가운데 빈대인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BNK금융이 '빈대인 체제'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정부의 해양수도권 조성 및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전략에 발맞춰 지역중심의 투자를 적극 확대중인 만큼 BNK금융 임추위가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차기 회장 선정을 위한 2차 후보군 명단(숏리스트)을 확정했다.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 안감찬 전 BNK부산은행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BNK금융 임추위는 2차 후보군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과 논의를 거쳐 12월8일 최종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후보자는 이후 이사회 인준을 거쳐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BNK금융그룹을 이끌게 된다. BNK금융지주가 내규상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만큼, 빈대인 현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다.

BNK금융그룹에서 30년의 경력을 쌓은 안감찬 전 부산은행장을 포함해 사실상 '내부 후보자' 4명의 경쟁 구도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빈대인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각 계열사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지속중인 방성빈 은행장과 김성주 대표가 '빈대인 체제'에서 임명된 인물인 만큼, 리더십의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체제 지속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방성빈 은행장과 김성주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각각 임기를 시작했다. 같은 해 3월 임기를 시작한 빈대인 회장의 첫 인선이었다. 방 은행장과 김 대표는 이후 BNK금융 계열사의 안정적인 성과를 이끌었고, 올해 초에는 각각 1년의 연임을 확정지었다. 빈 회장의 연임이 확정된다면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되는 두 사람의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비(非) 현직으로는 유일하게 숏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안감찬 전 BNK부산은행장이다. 다만 안 전 은행장은 지난 2022년 임추위에서도 빈대인 회장과 경쟁했던 만큼,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한 빈대인 회장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폴란드 신형 잠수함 3척 수주 탈락

K-원팀, 캐나다 CPSP 사업 '위태'

폴란드의 신형 잠수함 획득 사업(오르카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탈락하면서 K-잠수함 수출 전략에 차질이 발생했다. 수주실패의 원인으로 기술 경쟁 외에도 정치·안보 요인이 크게 작용하면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역시 절충교역 확대와 안보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가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한 '오르카 프로젝트' 입찰에서 2000t급 'A 26 블레킹급 잠수함'을 내세운 스웨덴 사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오르카 프로젝트' 스웨덴 기업 선정
기술경쟁 외 정치·안보 요인 등 영향

캐나다 60조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절충교역 확대·안보협력 강화 필요

한국은 지난 9월부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잇달아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막판 후방 지원에 나섰지만 최종 수주에 실패하게 됐다.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군사 동맹 네트워크를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오르카 프로젝트 결과 후 시장의 관심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로 이동하고 있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올라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와 달리 캐나다가 비(非)유럽 국가이지만 이번 사업 역시 NATO 내부 조달 구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독일은 NATO 회원국으로서 그간 다수의 잠수함을 연합국에 공급해 오면서 캐나다와도 장기간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독일은 우위를 갖는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한 212CD 잠수함은 북극 해역 작전이 가능한 최신 디젤 잠수함이다. 캐나다가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운용 조건과 부합하고 NATO 표준 장비와의 완전한 호환성도 강점으로 꼽힌다.

반면 한국의 잠수함 수출 실적은 인도네시아 3척이 전부로, 북극 해양 운용 능력은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독일은 외교·산업 협력을 결합한 절충교역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독일 해군은 올해 캐나다제 수상함 전투체계 'CMS 330'를 약 10억 달러 규모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은 가격 경쟁력, 빠른 건조 기간, 기술 이전 범위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은 빠른 납기 제공, 현지 조선소 및 부품 생태계 구축, 유지·보수·정비(MRO) 체계 일괄 제공 등을 포함한 '패키지 제안'을 캐나다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형 잠수함이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아 캐나다의 전력 공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본다.

다만 캐나다 수주전을 위해서는 기술·가격 요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독일이 외교·산업·안보 협력을 연계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캐나다산 민수 항공기·무기 구매, 공동 개발·투자 기반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연계 등 절충교역 확대와 안보협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롯데, 오늘부터 예측가능 수시채용 시작

계열사별 3·6·9·12월 채용 진행

롯데가 오는 12월 1일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은 계열사별 채용 일정을 3, 6, 9, 12월에 맞춰 진행하는 롯데의 차별화된 채용 방식이다.

이번 채용에는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이노베이트, 롯데건설, 롯데홈쇼핑 등 12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모집 분야는 영업, 마케팅, 상품기획(MD) 등 30여 개 직무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실무 중심의 아이엠(I'M) 전형을 통해 PD 직무 인재를 선발한다. 직무 관련 경험이 담긴 포트폴리오 평가와 현장 오디션을 통해 실무 역량을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는 채용 기간에 맞춰 오프라인 채용 상담 행사도 연다. 12월 1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와 4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2025 윈터 롯데 잡카페를 개최한다.

/손종욱 기자 handbell@